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김 진 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69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14일

발 의 자 : 김진숙의원 외 19명

1. 주 문

-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함.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해역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하였고 이에 한국 정부는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음.
- 또한, 미국 국방부는 일본해 표기 논란에 대해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으며,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힘.
-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일본해'의 표기 입장을 철회하고, '동해' 표기를 실시 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일본은 역사적 정당성을 인식하고, 동북아 평화 공존을 위해 '일본해' 표기를 폐기해야 함.

3.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4. 결의안 : 별 첨

미국 국방부의 ‘동해’ 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안산시의회는 73만 안산시민을 대표하여 미국 국방부의 한·미·일 훈련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면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미군 측에 ‘일본해’ 표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미 국방부는 향후 ‘동해’를 어떻게 칭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일본해’가 공식표기 라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미 국방부가 ‘일본해’란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0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 전력이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을 때도 관련 자료에서 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논란이 일자 ‘한일 사이 수역’ (waters between Korea and Japan)으로 바꾸기도 했다.

미국이 앞으로 동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할 경우 ‘일본해’라고 표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협력을 말하며 뒤로는 우리 영해를 침해하는 거나 다름없다. 더욱이 독도 영토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바다는 ‘일본해’고 독도는 한국 영토이나 일본 바다위에 독도가 둥둥 떠 있는 셈이 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이는 또 국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는 지난 1977년,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해 단일 명칭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각각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것은 몰라도 ‘일본해’라고 단독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해’는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바다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관련된 바다이다.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의 식민지 재배시기에 강제로 사용되기 시작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명칭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바다의 명칭은 하나의 나라 이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동해’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본해’와 함께 병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일본해’ 표기를 수정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 철회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하겠다는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상 주권침해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각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일

안산시의회